

## “대전권 대학 치대 신설 불가” 정 협회장, 엄홍철 대전시장 만나 현안문제 논의

정재규 협회장이 엄홍철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치과계 현안을 논의했다. 정 협회장은 10월 12일 오전 중부권 학술대회(CDC 2003) 격려차 대전시청을 방문, 엄홍철 대전광역시장을 예방하고 해당 지역 치대신설 불가 및 대전지역 노인치사업 선정방식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협회장은 치과계 행사를 위해 대전시청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엄홍철 시장은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치과계에서 노인무료치사업을 전개해 노인복지

에 공헌한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협회장은 목원대와 충남대 등 대전지역 일부 대학이 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홍철 대전시장, 정재규 협회장, 기태석 CDC조직위원장, 김동기 치협 재무이사 등이 배석했다.

한편 엄홍철 시장은 행사당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재규 협회장, 임철중 전 치협 의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하고, 기자제 전시회를 둘러보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여 대전지역의 치과계 위상을 실감케 했다.

## 신년교례회는 1월 9일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은 10월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17일로 잠정 결정하고,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기로 했다.

또한 신년교례회를 1월 9일 개최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

침서' 발간에 따른 예산항목 전용을 승인했으며, 수재의연금 2천만원을 운영기금에서 차입한 것을 추진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치아건강잔치 준비 상황, 치과 전용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이 보고됐다.

## 배상책임 보험가입 5천명 돌파 '눈앞'

치협과 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한 치과 의사가 10월 16일 오전 12시 현재 4920명으로 조만간 5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갭신대상자들이 많은 10월에만 825명이 새로 가입하거나 갭신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 운영사인 엠디하우스 관계자는 "10월달에만 가입자들이 하루에 20~30명이 훨씬 넘게 들어오고 있어 올해 5천

명 이상 가입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보험가입 증명은 엠디하우스가 MD하우스([www.mdhouse.com](http://www.mdhouse.com))나 DDS하우스([www.ddshouse.com](http://www.ddshouse.com))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는 의료사고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내년 3월경 소식지 발간” 치의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치의학회(회장 김종열)는 내년 3월경 소식지를 발간기로 했다. 치의학회는 10월 22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치의학회의 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일년에 3월과 9월 두 번 소식지를 발간기로 하고 그 출발점은 내년 3월경으로 하기로 했다.

김종열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외제도와 관련 "치의학회에서 치의전문외제 시험 관리를 맡게 돼 치의학회의 특수화된 업무를

확보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2008년에 치의전문외제 배출되기 위해 적어도 2007년 7월까지의 문항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치의학회가 각 학회별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영문 치의학회의 SCI 등재를 위해 각 학회별로 선정한 편집위원 현황을 소개하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편집위원으로 정당한 인물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공의 시험 배점기준 확정 복지부, 관련 기준 제정 고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등이 확정됐다.

또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등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인턴의 경우 치과대학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이며, 레지던트의 경우는 인턴 근무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로 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해 추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관련, 수련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확인하고 치협에서 인준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해 과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기로 했다.

또 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 동일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에서 제외된다. 특히 인턴의 경우는 구강외과만 설치된 수련치과병원의 경우를 제외한 인턴 수련은 개설된 진료과목 중 최소 3개과 이상을 각 4주 이상 수련해야 하며, 잔여기간의 수련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과 관련, 구강병리과를 제외한 구강외과 등 9개 전문과목은 다른 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인정을 허용치 않았으며, 구강병리과만 구강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취득자에 한해서는 1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인정했다.

## “대국회 총력전” 정 협회장, 박시균·김성순 의원과 잇따라 면담

치협은 현재 일부 부도덕한 회원들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을 관철하고 김희선 의원 및 대한노인회가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해 달라는 입법청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 국회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10월 29일 박시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면담에 이어 30일 김성순 의원을 만나 치과계 현안인 의료법개정, 노인틀니 입법청원에 대해 논의했다.

정 협회장은 또 각 의원들과 유선을 통해 치협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 윤리적인 회원의 자율징계와 의료기관 개원, 휴·폐업시 반드시 중앙회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 청원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청원한 것이다.

3개 의료계 단체가 이같이 청원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단체의 설립과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인단체에게는 회원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나 과잉진료 여부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율징계권과 관련 국내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지난 93년부터 행사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법에 약사윤리와 약사권한 업무의 일부를 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율징계를 행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청원 중 치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대한노인회 10만여명이 청원한 노인틀니 관련 청원이다.

청원의 골자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연구 및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보험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노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틀니수요를 낮추기 위해 치아우식증 및 치주 질환관련 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화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차라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노인틀니 보험이 적용될 경우 3천5백억원 이상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한 개 항목 진료 때문에 국민보험료를 1.7%인상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협은 노인틀니 보험화가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고 ▲질 나쁜 틀니를 대량 양산, 국고손실은 물론 치의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노인, 치과의사 모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한 만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